

건설업계, 하도급 직불제 반대

공정위 올해부터 16조원 규모 공공발주 공사 적용... 하도급업체 자금경색 초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16조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에 적용하려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하도급 직불제)를 두고 건설업계의 반대가 격렬하다.

원청업체인 종합건설업체뿐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마저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화하면서 공정위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다.

하지만 공정위도 하도급 직불제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도입한 정책인 만큼 끝까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측의 대립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7일 광역자치체 17곳과 공공기관 20곳이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등의 공사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원사업자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건설업계, 자금 운용 막혀 유동성 경색 우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하

도급 직불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때문이다.

정부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대금바로(서울시) 등을 운영 중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건설사들이나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경색된다는 점이다.

통상 건설업체들은 1개 현장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급하게 자재를 구입하게 돼 자금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공사 현장에서 남은 돈을 투입하거나, 미리 공사 전에 받은 대금을 투입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면서 각각의 건설 현장에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 지급된 공사비는 그 현장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다른 현장에 지급될 수 없다. 중간에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공정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면

제 '카드'로 건설사 달래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하자 공정위도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면제란 당근을 꺼내들었다.

직불제를 도입하는 건설사에게 보증 수수료를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란 원사업자가 사업이 어려워 부도나 가압류 등이 발생할 때 건설사 대신 공제조합에서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 등을 지급해주는 보험 성격의 제도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원청업체가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에 원청업체가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을 사용하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하는 조항을 담았다. 보증이 면제되면 원청업체는 그만큼 수수료 등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 받은 기업이 부도나 이 회사와 일하는 수백개의 협력업체들은 공사비를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 직불제랑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별개의 사업인데도 원 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공정위가 두 제도를 엮었다"면서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인진수 기자

전북경진원 순창 농특산물 판로 지원

13일부터 온라인 프로모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순창군 농특산물 제품의 국내·외 판로확대와 식품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구축하고 있는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순창군 중소기업의 농특산물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굳이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순창의 북부자 제품 및 전북지역 제철농산물 온라인 프로모션을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중순까지 온라인 오픈마켓인 '11번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류제품 등 주요 농특산물 제품 판로확대와 순창군 생산 친환경우수 농특산물 제품의 국내외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전북은행, 어르신에 주먹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8일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소외계층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제7회 사랑한가득 주먹밥 사랑의 점심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북은행 전 직원 봉사활동 기금으로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부행장급 전주시의원, 전북은행 오병진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이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주먹밥과 과일, 기념품을 대접했다.

전북은행 오병진 부행장은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두부 실온보관·유통 가능

식약처, 냉장보관 안해도 판매토록 해

앞으로 밀봉 포장 두부나 목 등의 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밀봉 포장 두부나 목 등의 제품도 실온에서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포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밀봉 포장된 두부와 목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 형태도 제조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두부와 목 제품은 현재와 동일하

게 냉장상태로 보관·유통해야 한다. 또 식품접객업소에서 가열하지 않고 조리하는 샐러드, 갈집이 무침 등의 대장균 규격 기준을 10cfu(세균 개체 수)로 완화한다.

아울러 국내에 신규 등록된 아미노산첨가제 등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델타메트린 등 농약 42종의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국내에서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식품 중 잔류 허용기준이 없었던 난드롤론(대사촉진제)에 대해 식품 중 잔류 허용기준도 신설한다.

/인진수 기자

화물차원인 고속도로 사고 대책 추진

한국도로공사 전북지부가 화물차 원인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 대책 추진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41%(32명→45명) 증가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전북지부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 호소문을 보내고 주요 불게이트와 휴게소에서 졸음사고 예방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고속도로 화물차 모범운전자 선발 포상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제 합업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



해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이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골자다.

전북중기청-조달청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협약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택)과 전북조달청(청장 임종식)은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양기관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8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이제는 세계시장

에서 활약하여야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력방안을 서로 마련키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해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공공기관 및 기업인에게 공공조달제도 교육,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품 등 우선

구매,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촉진 등이 주요골자다.

한편 전북중기청과 전북조달청은 양각서의 성실행과 협력방안 실행을 위해 공공조달지원관을 지정 허타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광영 기자

매출 1조이상 중견기업 육성

주영성 중기청장 간담회서

주영성 중기청장은 8일 "앞으로 모든 정책 방향을 '중소기업 육성'에서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청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초청 오찬 간담회를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 수의 17%에 불과하지만, 수출과 고용면에서 중견기업 평균 10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기청이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는 SFC그룹, 농심, 한샘, LF, 휴맥스, 동원에프앤비 등 12개 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중기청은 중소·중견기업이 매출 1조원 이상 선도 중견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초기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5월29일, 중견기업법을 개정·공포했다.

특히 '우수한 인재가 곧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판단에 따라 핵심인력 확보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내일채움공제'를 전체 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월드클래스 300 등 기존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 개편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R&D, 해외마케팅 사업도 신설한다.

이날 정책 건의에서는 해외 현지 정보 제공강화, FTA 관련 교육 확대,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신속한 통관 등 주로 해외 수출업에 따른 애로사항이 주를 이뤘다.

/인진수 기자

전주 우정신세계 아파트 비리의혹

전주시 우정신세계아파트가 최저가나 참제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8일 우정신세계아파트 입주주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해 참여한 4개 업체 중 'A'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업체 선정에서 최저찰제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정구형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 3회(총650만원)를 받았다.

이후 'A' 업체는 아파트입주주대표회의에 참석,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주자대표회의는 "'A' 업체가 위법행위를 방조함을 넘어 조장했다"면서 "이는 주택법 제43조의 4 제1항을 위반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로"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